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지속 발전의 토대 마련 추구

- 국토부, 건설시장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위한 20개 정책 과제 제시 -

최민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mschoi@cerik.re.kr

저성장 시대에 대응, 질적 성장 추구

최근 국토부에서는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향후 5년 간의 건설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 시공 위주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판단 아래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지적과 같이, 최근 건설산업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어 체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과도하여 수급 불균형 상태가 유발되고 있으나, 시공 능력이 갖춰진 우량 업체를 선별하는 기능은 매우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건설 기술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며, 기능 인력 고령화도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나아가 건설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수직적 문화 역시 건설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5년 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하여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

획'에서는 정책 비전으로서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을 제시하고, 1)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 구조 건설화를 통한 내실화, 2) 건설산업 성장 동력 강화를 통한 외연 확대, 3) 공생 발전 및 선진 건설 문화 정착을 통한 동반 성장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7개 중점 과제 및 20개의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 구조 건설화와 관련하여 등록·발주·시공 관리 등 건설 제도의 선별 기능을 개선하여 옥석을 골라내고 부실 업체를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공공공사 입찰시 가격·기술력·공사 수행 능력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중점 과제 및 세부 추진 과제

목표(3)	중점 과제(7)	세부 추진 과제(20)
I.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 구조 견실화	1. 산업 구조 내실화를 위한 진출입 체계 강화	① 건설시장 진입 기준 합리적 개선 ② 부실 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강화
	2. 업체 선정 지원 시스템 개선	③ 적정 업체 선정과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④ 건설 보증 필터링 기능 강화 및 보증기관 감독 강화 ⑤ 적정 업체 선정을 지원하는 정보 체계 강화
	3.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기반 공고화	⑥ 'Smart 건설' 활성화를 위한 'Soft 기술' 역량 강화 ⑦ 건설 기능인력 양성 체계 구축 및 직업 전망 제시 ⑧ 건설장비 안전관리 강화 및 골재 수급 기반 안정화
II. 건설산업 성장 동력 강화	4. 미래 시장 창출을 위한 해외건설 5대 강국 도약	⑨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 및 기술 경쟁력 제고 ⑩ 투자 개발형 사업 및 고부가가치 공종 진출 확대 ⑪ 중소 건설업체 해외 진출 활성화
	5. 신시장 발굴 등 수요 기반 확충	⑫ 생활형 SOC 확충 및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 ⑬ 신규 건설 수요 발굴과 제도적 지원 ⑭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건설 기술 R&D 활성화 지원
III. 공생 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6. 동반 성장의 가치 실현을 위한 불공정 관행 근절	⑮ 적정 공사비 반영 및 발주자 책임 강화 ⑯ 공사비의 공정 지급 체계 정립 ⑰ 건설공사 참여자간 수평적 파트너링 환경 조성
	7.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⑱ '3C'의 실천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⑲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녹색 건설 환경 구현 ⑳ 안전한 건설 현장 작업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 방식을 도입하고, 개별 발주기관별로 공사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주 방식과 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건설산업의 성장 동력 강화를 통한 외연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의 축소에 대응하고 미래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건설 5대 강국' 도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동·동남아 및 플랜트에 편중되어 있는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의 투자 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내 교통

인프라 개선, 취약 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 시설 등 생활형 SOC 시설을 확충하고, 탄소 저감형 건축과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IT가 융합된 첨단 건설 분야 등 새로운 건설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생 발전 및 선진 건설 문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문화의 개선을 통해 동반 성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발주자와 건설사 사이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나아가 부실·비리·환경

훼손 등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윤리경영 등 업계 스스로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등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건설업 진입 기준 강화 전망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건설시장 진입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부실 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강화를 들 수 있다. 건설시장 진입 기준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실무 참여진간에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 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해당 업종에 등록하여 영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업종별로 기술자는 2~12인, 자본금은 2억~20억원, 사무실 보유 등의 등록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등록제도는 충분한 시공 경험이 없거나 부실한 업체에 대한 선별 기능이 미흡하여 그동안 전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업체의 실질적인 시공능력 확보를 위해 기술 인력의 시공 경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실무 경력에 상관없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나, 기술자 중 일정 비율은 시공 경력을 가진 자를 포함하도록 등록 조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부실 업체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별 최소 수준의 사무실 면적 기준도 추가될 전망이다.

시공 경력에 따라 건설시장 참여 범위가 확대되도록 등록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는데, 예를 들어 종합건설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관련 전문건설업 시공 실적을 요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기간 관련 전문 업종 시공 실적이 있는 경우 종합건설업 등록시 기술 인력, 사무실 기준 등 등록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는 사실상 전문건설업을 거쳐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도록 규제하는 것인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무 참여자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직접시공 능력을 중시하는 정책 흐름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

한편, 부실 업체의 건설시장 퇴출을 강화하는 배경은 건설업 등록 이후 등록 요건 미달 등 시공 능력을 상실한 페이퍼 컴퍼니가 시장에 상존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이 공사 수주 후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사 전매 등을 통해 시장 교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시공 요건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직접시공 의무 예외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공 평가 결과를 업체별로 종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건설업체의 등록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도 내실화될 전망이

다. 등록 업무를 위임받은 지자체를 통해 자본금 가장 납입, 기술 자격 대여 등 허위 등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직접시공 의무 위반, 일괄 하도급 등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의 원·하도급 정보관리 강화를 통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등록, 입찰, 공사 관리, 사후 관리 등 각 단계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금번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진일보한 계획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향후 5년 간 건설산업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 고도 성장에서 벗어나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구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건설업계 내부의 자성 어린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탄생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 보다 실천적인 계획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건설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CERIK